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01 주요 내용 및 현황

-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2015.07.15.)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의원은 1인실까지 급여를 적용하며,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일당 정액에 포함.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도 급여화하였음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이며, 목적은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암관리법 제2조)
- 국내 암의 발생률은 '12년 기준 10만 명당 445.3명이며, 사망률은 10만 명당 146.5명임

인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자수		117,089	125,666	134,407	146,860	154,552	167,570	181,953	195,670	206,615	220,265	224,177
발생률		243.3	260.1	277.2	301.7	316.1	341.1	368.3	394	414.2	439.5	445.3
사망자수		62,598	63,352	64,315	65,117	65,519	67,561	68,912	69,780	72,046	71,579	73,759
사망률		130.1	131.1	132.6	133.8	134	137.5	139.5	140.5	144.4	142.8	146.5

- 말기암환자의 의료행위에 연간 100억원 이상 사용되거나 완화의료를 받는 암환자는 12.7%에 불과
 - 국내 암환자의 30-40%는 말기암으로 진행되며, 사망 2주전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로 최소 1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음
 -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medicare 43%, 대만 3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이용 의향은 2014년 조사에서 73.9%가 '그렇다'라고 밝힌 반면, 전국 호스피스 기관은 60곳, 병상은 1,009개에 불과하며, 경기도는 아주대학교병원 등 13곳 에서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음

0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과제

-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된 영국과 호주에서는 호스피스를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의료제도로 인식
-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의료분야에서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 관리가 요구됨
 -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됨에 따라 제공 인력 관리 등 서비스 질관리 체계가 요구됨

자료 :
2012 보건복지부
암등록 통계,
2013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료 :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국민건강
보험공단. 2014

2.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안, 공유경제

01 주요 내용

- 복지, 환경, 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공유’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제품과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경제 활동

-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Lessing, 2008)
- 재화,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음

우리 집을 공유하는 Airbnb

- 세계 최대 빈집, 빈방공유 서비스 기업으로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는 매칭 플랫폼 사례
- 공유경제 기반 글로벌 플랫폼 구축, 이용자 SNS 리뷰를 통한 신뢰성 제고, 자체 지불 결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자 편익 제고 등 기존 숙박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편 제공과 세탁, 청소 서비스 등으로 숙박서비스 개선 영역으로 확대

맞춤형 일자리 중개 TaskRabbit

- 시간급(파트타임), 임시직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관련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모바일 일자리 장터
- 주로 청소,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중심의 인력을 중개하고 있지만, 최근 프리랜서 채용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그러나 공유경제 이면에는 정보비대칭, 편익의 편중, 기존 경제활동 주체의 활동영역 침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함
 - 우버택시와 기존택시 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기존 경제활동 주체의 활동영역 침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우려됨
 - Airbnb의 사례는 여러 집을 가진 임대사업자의 조세회피가 빈번하고, 뉴욕시의 Airbnb에 등록된 주택 중 2/3가 불법행위에 악용되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함
- 또한, 공유자동차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및 책임 소재, 제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공유경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도내 다양한 자원(인적, 물적, 지식 및 정보 등)의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복지 관련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도형 플랫폼 복지 체계 구축

플랫폼 복지(Platform Welfare) : 기존의 다양한 복지자원(인적, 물적, 공간 등)을 활용하여 복지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창출을 위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토대이며, 이러한 플랫폼 복지는 ‘수요자-플랫폼-공급자’ 간의 양(쌍)방향성, 상호연계효과, 다수의 주체들의 참여와 연계 등의 특징을 가짐

- 지역 차원에서 공유경제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활복지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경기도는 복지관련 정보와 자원을 한 곳에 집적하여 자원들의 결합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

다양한 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해 공유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플랫폼 복지 체계 구축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공유경제를 활용한 복지정책

‘공유’ 경제를 복지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서울시 등 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조례 명	제정일	담당부서	
경기	경기도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14.12.31.	경제실 공정경제과
	성남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4.11.10.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12.12.31.	사회혁신담당관	
부산	부산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15.1.1.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14.12.30.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 서울복지재단은 ‘공유복지 플랫폼 WISH’를 구축하여 복지지식과 현장에서의 복지 공유 모델 등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여, 이 공간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모델 발굴을 기대하고 있음
- 광주시 광산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39개 시설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유계획을 발표하였고, 공유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해 ‘GSimap’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공급할 예정

2.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커뮤니티 모집

- 경기복지재단은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사업 개발을 위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를 공모
- 모집분야는 복지지향 공동체 사업 발굴과 풀뿌리복지 민관협력 사업분야이며, 신청자격은 2개 이상의 시군을 포함한 구성원 및 기관 5인 이상으로, 신청서 등을 이메일 (ico6572@ggwf.or.kr)로 제출
- 선정된 커뮤니티는 최대 2백만원의 아이디어 활동비가 지원되며, 발굴된 신사업은 2016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신규사업으로 활용될 예정
- ※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3.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사회복지연대회의	제1차 대표위원 및 기획조정위원 연석회의 • 일 시 : 2015. 7. 24.(금)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도서관 3층 교육장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16년 신청사업 공고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 • 신청기간 : 2015. 7. 13.(월) 9:00 ~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proposal.chest.or.kr)

03 FACT CHECK

복지재정 누수는 부정수급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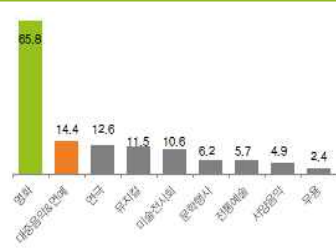
- “정부가 매년 복지 예산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지만 관리부실로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재정이 4461억원에 이른다(“줄줄 새는 복지예산 그리고도 예산 타령”, 국민일보’ 15.7.9.)
 - 최근 감사원의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보고서” 를 근거로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급여 352억원, 의료급여 504억원, 국가장학금 442억원 등 총 1298억원이 낭비되었다고 기사화함
- 그러나 금번 감사원 결과의 핵심은 복지재원의 부당지급에 대한 문제보다는 복지서비스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체계에 대한 지적임
 - 보고서에 제시된 주식을 보유한 기초연금수급자나 주택 보증금이 2천만원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에 해당하며 의도된 부정수급 이라기 보다는 정보부족에서 발생한 과오지급이라고 할 수 있음
 - 복지서비스 및 급여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복지재원의 재정 누수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연간 1천 52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대법원 등 부처 간 공적자료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함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복지재정의 누수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자자료의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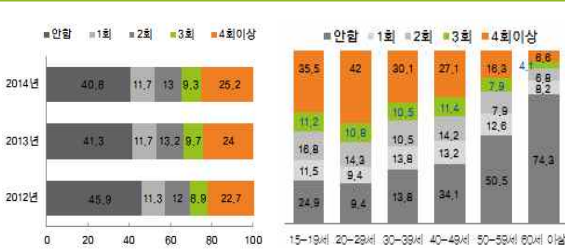
04 통계로 보는 복지

문화공연 얼마나 보시나요?

가장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경기도민 문화관람 횟수(연도별, 연령대 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 2014 사회조사

- 한국인이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의 1위는 영화 관람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며 대중음악 공연(14.4%)과 연극(12.6%)이 뒤를 이룸
- 경기도민의 문화관람 횟수는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문화관람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12년 45.9%에서 2014년 40.8%로 감소하였고 “4회 이상”이라는 답변은 2.5% 상승하였음
- 경기도민 중 문화관람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20대이며, 60대 이상 노인의 74.3%는 문화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마우처 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